

광주·전남특별시교육청 밑그림은... '자치·분권 확대' 방점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초석이 될 특별법안에는 온전한 '교육자치'에 방점이 찍힌다.

직선제 교육감 1명·부교육감 3명 체제로 초광역 교육 행정조직을 갖추고, 지역여건 맞춤형 교육·국제 경쟁력 강화·지역전략산업 인재 육성 등 교육 전 분야의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다.

15일 광주·전남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특별시(가칭)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초안 중 '교육 자치'는 1개 편(編)으로 따로 담겨 4장(章)·18조(條)로 잠정 구성돼 있다.

우선 출범할 통합특별시에는 선출직 교육감을 1명을 둔다. 기존 법령에 따라 통합교육감은 주민 직선제로 선출한다.

시도 지사·교육감이 이미 합의한 대로, 통합교육감 선출을 명문화한 것이다.

특히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달리, 현행 지방교육자치법·교육기본법의 테두리 안에서 1특·광역시 내 1교육감 원칙을 따랐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교육감을 현행 법령에 따른 선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특례를 담았다. 이는 복수교육감제의 여지를 남겨 두어 이를 둘러싼 접점을 찾기 못하고 있다.

다만 특별법에는 교육 환경·인프라 등이 크게 다른 광주와 전남 지역의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듯한 특례를 뒀다.

교육자치조직권 특례 조항을 통해 부교육감을 국가공무원 1명, 지방공무원 2명 등 총 3명 체제로 둘 수 있도록 했다. 특별시교육청 내 각 권역별 여건에 맞는 교육 행정을 펼칠 수 있거나 분야별 책임 행정을 실현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부교육감의 명칭·사무·권한과 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역시 조례로 규정키로 했다.

광주 교육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나왔던 시도간 인사 교류에 따른 불이익 문제에 대해서는 '중정 근무권역 유지 원칙'을 명문화했다.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선발된 특별



광주교육청은 14일 오전 청사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현황 공유 교육가족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광주교육청 제공

특별법 초안 내 '교육 자치' 4장·18조로 구성될 듯 직선교육감 1명·부교육감 3명 체제... 현 법령 조화

시교육청 공무원(국가공무원·교육공무직원 포함)은 종전 광주 또는 전남 관할 구역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특별법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종전 광주 또는 전남도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채용 조건과 관련해 종전의 규정·공고문에 따르도록 했다.

교육 운영의 자율성 확대도 특별법안에 담겼다.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자율학교 운영, 영재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 등 사항과 관련해 현행 교육부 장관 권한을 특별시교육감에게 일부 이양하거나 특별시 조례로서 정할 수 있게 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역시 각급 학교 설립 승인 권한은 특별시교육감에게, 대학급 기관은 특별시장 권한으로 했다.

교육국제화특구와 관련해서도 특별시장·교육감이 공동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

로 규정했다.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 국제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도모 차원에서 특별시의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다.

현행 법령 상,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부 장관에게 지정 권한이 있었다. 광역단체장·교육감은 공동으로 교육부에 요청만 할 수 있었다. 특구 지정 심의 역시 교육부 내 위원회가 아닌 특별시장 조직에 둘 수 있으며, 관련 규제 역시 상당 부분 조례로 위임된다.

전남 교육 현안인 농어촌·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을 의무화했다. 농어촌 유학, 도농 지역간 교육 교류와 연계 교육 활성화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행정통합의 기대 효과 중 하나인 지역전략산업 집중 육성에 대한 교육 정책의 방향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지역 전략산업 특성화 학과 지역인재

선발 특례 등을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학과에 대해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특별전형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성화 학과 지정 기준,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요건과 지자체 지원 사항 등도 특별시 조례 위임 입법 사안으로 정했다.

다만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인사 교류·승진 체계 불이익 우려, 민주시민 교육·일반 공립교육 지원방안 누락, 교육행정 통합에 따른 일부 지역소의 등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는 여전하다. 때문에 특별법안 발의 전까지 교육계의 충분한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굵직한 대원칙을 제외한 특별법안 내 '교육 자치' 내용 중 일부가 수정될 여지는 남아 있다.

광주·전남 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은 이달 말께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뒤 2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2월28일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1일 통합지방정부 가칭 '광주·전남 특별시'가 출범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1일 통합지방정부 가칭 '광주·전남 특별시'가 출범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1일 통합지방정부 가칭 '광주·전남 특별시'가 출범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1일 통합지방정부 가칭 '광주·전남 특별시'가 출범한다.

구조적 문제, 불법행위 여부까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확凿한 증거와 분석을 통해 정확한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오후 1시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건축물 구조물이 무너지는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명이 매몰됐고 모두 사망했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상무지구 옛 상무소 각장 부지(1만200㎡)에 연면적 1만1286㎡,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는 공공도서관이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상무지구 옛 상무소 각장 부지(1만200㎡)에 연면적 1만1286㎡,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는 공공도서관이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상무지구 옛 상무소 각장 부지(1만200㎡)에 연면적 1만1286㎡,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는 공공도서관이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경찰, 시 종합건설본부 압색

공사 관계자·공무원 22명 입건... 24명 출국금지

경찰이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광주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5일 오전 9시께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사무실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사무실 내부 전산망 통신기록과 광주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구입종합건설과 하청업체 등 공사 관계자와 광주시 공무원 등 22명을 입건하고, 24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구일종합건설 서울 본사와 광주 현장사

무소, 하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해 설계·시공·감리·감독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과 자료에 대한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 결과를 검토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업무처리 과정의

오랜 병간호·생활고 지쳐 그만 가족살해 반인륜 범죄 되풀이

치매 노모 간병 도중 살해 60대 검거... 유사 사례 반복 경제적 부담 끝에 일가족 살해한 40대 가장 징역 30년 병간호 부담에 동반 극단적 선택 시도 아내도 징역형 "복지 정보 접근 어려움·사회적 연대 기반 실종 우려"

병간호와 생활고라는 이중고를 견디지 못하고 가족을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죄가 되풀이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양자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줄 사회적 안전망 구축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존속살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 광주 북구 용두동 자택에서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홀로 간병해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오랜 간병 생활과 경제적 어려움 등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오랜 간병 생활과 경제적 어려움 등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을 시인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된 병간호와 생활고를 이유로 부양자들이 가족을 살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6월에는 채무로 인한 생활고를 이유로 배우자와 두 아들이 탄 차량을 바다로 몰아 살해한 4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홀로 구조돼 살아남았다.

건설현장 일용직 노무팀장인 B씨는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1억6000만원 상당의 빚을 져 채무에 시달렸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아내 간호가 힘들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 "부양자를 돕는 제도 등 지역 사회 통합돌봄 내용이 홍보 부족이나 정보 접근성 문제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적극 알리고, 위험 징후가 보이는 이웃을 기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24년 11월에

이보다 앞선 지난 2024년 11월에

이보다 앞선 지난 2024년 11월에

이보다 앞선 지난 2024년 11월에

이보다 앞선 지난 2024년 11월에

이보다 앞선 지난 2024년 11월에

이보다 앞선 지난 2024년 11월에

이보다 앞선 지난 2024년 11월에

이보다 앞선 지난 2024년 11월에

이보다 앞선 지난 2024년 11월에

이보다 앞선 지난 2024년 11월에

이보다 앞선 지난 2024년 11월에

이보다 앞선 지난 2024년 11월에

이보다 앞선 지난 2024년 11월에

이보다 앞선 지난 2024년 11월에

이보다 앞선 지난 2024년 11월에

이보다 앞선 지난 2024년 11월에

이보다 앞선 지난 2024년 11월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취급차량: 1t~12t,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정보지·신문 광고대행, 광고전단지 운송·배포,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기업물류 운송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